

# 세계도시

2006. 5. 1. 제142호

## 목 차

### 도시경영·경제

1.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취업 우대정책 시행 (북경)
2.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영·기술 전문가 파견 (영국)
3. 안전·안심·안정을 고양하는 현민(縣民) 지원 감세 실시 (일본 나가노縣)
4. 지역별 인구변동 3대 요인은 환경, 주거비, 고용기회 (호주)

### 디지털 도시

5. 이차원 코드를 활용한 도로·하천·공원 정보 제공 (동경)
6.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저렴한 항공사진 촬영 (런던)

### 복지·문화

7. 구민공익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동경都 나카노區)
8. 사회복지기금 Opportunities Fund의 1차 지원대상 발표 (런던)
9. 허가규정 위반한 탁아소에 행정처벌 꺼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10. 보육원을 이용해 시간제 일시보육사업 실시 (동경都 아라카와區)

### 도시환경

11. 재생가능 에너지 전략 수립 (동경)
12. 지역통화인 에코머니(eco-money)로 서비스 거래 (일본 효고縣)
13. '동경 그린십 액션' 참가 기업 모집 (동경)
14. 지역계획과정 개선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가속화 필요 (영국)
15. 혼잡통행료 부과와 대기오염의 관계 보고서 발표 (영국)

### 도시계획·건설·주택

16. 올림픽선수촌을 환경친화 에코빌리지로 재개발 (런던)
17. 도시공간 개발의 질과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코드 적용 (영국)
18. 인구 100만의 신도시, 사이타마市の 미래 과제 (동경都 사이타마市)
19. 구 공장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오락, 휴식공간 조성 (상해)

### 방재·안전

20. 시민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이용인원 제한 (북경)

### 1.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취업 우대정책 시행 (북경)

2006년 5월 1일부터 북경시는 市에 등록된 실업자와 국영기업의 직장폐쇄와 파산으로 인한 실업자, 도시계획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우대증'을 발급하고, 증명서 소지자에게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3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시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2006년 4월 11일부터 북경시 소재 상업·무역업, 서비스업(광고, 부동산중개, 사우나, 안마 등 제외), 근로자파견기업 등에서 '재취업우대증'을 소지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기존보다 20% 더 확대해 면세 혜택을 주고, 신규 고용 노동자 1인당 4800위안(약 62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매년 지급한다.

(北京晨報, 2006. 4. 11)

### 2.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영·기술 전문가 파견 (영국)

영국 정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브리스틀, 뉴캐슬, 버밍엄, 트라포드 등 20개 도시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정책을 향후 2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의 목적은 '비즈니스 장려 지구'(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지정과 함께 물리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각 도시에 파견된 전문가는 무료로 경영과 기술적인 조언을 하게 된다.

(Planning, 2006. 4. 4)

### 3. 안전·안심·안정을 고양하는 현민(縣民) 지원 감세 실시 (일본 나가노縣)

일본 나가노(長野)縣은 2006년도부터 창업, 고용, 복지, 환경과 관련해 안전·안심·안정을 고양하는 대책을 적극 수행하는 현민(縣民)에게 감세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창업자, 장애인과 모자가정을 고용하는 사업자, 친환경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금 1000만 엔(약 9000만 원) 이하의 창업자에게는 설립부터 3년간 면세해주며, 자본금 1000만 엔 이하의 창업자가 1명 이상의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의 모(母)를 고용할 경우에는 세액의 절반을 10만 엔(약 90만 원) 한도를 감세해준다.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자동차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친환경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ISO 14001이나 '에코액션21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세액의 절반을 10만 엔(약 90만 원) 한도로 감세해준다. 에코액션21 인증이란 중소기업, 학교, 공공기관에 환경대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개선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과를 종합해 평가하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환경성이 수립한 에코액션21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www.pref.nagano.jp/soumu/zeimu/genzei/seisakugenzei2.htm#001](http://www.pref.nagano.jp/soumu/zeimu/genzei/seisakugenzei2.htm#001))

#### 4. 지역별 인구변동 3대 요인은 환경, 주거비, 고용기회 (호주)

호주 통계국(ABS)이 발표한 2004/2005년 州별 인구동향에 따르면 퀸즐랜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州, 노던 테리토리州의 인구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된 전입 이유는 집값과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직기회가 많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퀸즐랜드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州의 인구증가 가속현상은, 시드니나 멜버른, 캔버라의 비싼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외에 광물수출 붐으로 고용기회가 많아진 것도 한몫했다. 또 제조업 중심에서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으로 기간산업이 이전하는 추세와, 교통체증과 과잉개발에 시달리지 않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방식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도 대도시 주변 해안지역에 전입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 급증 지역의 공통점은 고층 아파트가 거의 없는 전원도시로, 상당수의 자연친화 주택이 신축되고 있으며 주로 대도시에서 주택구입난에 질린 젊은 세대가 대거 이주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골드코스트市는 총 도시면적의 25%만 택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녹지와 농경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전입인구 급증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드니는 갈수록 악화되는 교통체증과 공해, 호주내 최고수준의 집값, 강·절도 사건 빈발 등 전형적인 '대도시병'을 앓고 있어, 이민자 유입 외에는 전출 인구가 증가해 인구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www.hojudonga.com/index.php?p\_menu=m\_read&seq=1555)

#### 한줄 뉴스

- 상해市, '상해의 꿈' 이루려는 외국인 취업장으로 변화 中
  - 일본인이 가장 많고 미국, 한국, 싱가포르, 독일, 말레이시아, 캐나다, 프랑스인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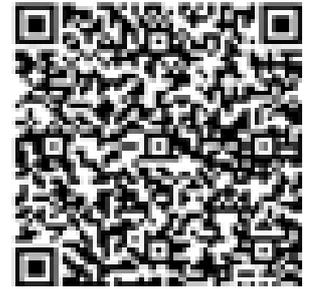
#### <북경>

- 소액담보대출 수혜자를 미취업 대학생, 농촌출신 노동자, 전역군인으로 확대하고 개인창업에 650만 원 대출 확대
-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실업상황 예측경보제도 시범 실시
- 2006년을 농촌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4개 농촌여행상품, 321개 농촌관광지역, 1만 7359 농촌관광가구 선정
- 도시경관 개선 위해 주요 도로변 아파트 도색작업을 실시하고 옥상광고물의 내용, 색채, 스타일에 대한 새 규정 마련
- 에너지 절약 시범기관으로 10개 공공기관 지정
  - 정부기관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민간기관에 비해 7배 많아

## 5. 이차원 코드를 활용한 도로·하천·공원 정보 제공 (동경)

동경都 건설국은 2006년 4월부터 도로·하천·공원의 정비 공사나 관광안내 정보를 이차원 코드를 활용해 휴대폰에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차원 코드로 제공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사 정보: 건설국이 시행하는 공사의 개요와 담당부서, 시행기업명, 전화번호 등으로, 정보안내지역은 건설국의 공사현장과 사업용지다.
- ② 동·식물 상세 정보: 도립 동·식물원이나 도로 가로수 정보를 제공하며 자세한 동·식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정보안내지역은 카사이 임해수족관(葛西臨海水族園), 카쿠미 식물원(神代植物園) 등이다.
- ③ 하천 정보: 하천의 수·방재 정보와 하천 주변 정보를 휴대폰 사이트에 실시간 제공한다. 별도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보안내지역은 스미다 강(隅田川) 등이다.



이차원 코드란 세로와 가로  
의 이차원으로 정보를 입력  
한 것으로, 종래 바코드의  
정보밀도를 높인 것이다. 종  
래의 바코드와 비교하면 수  
백 배의 정보량을 취급할 수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4/20g4c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4/20g4c200.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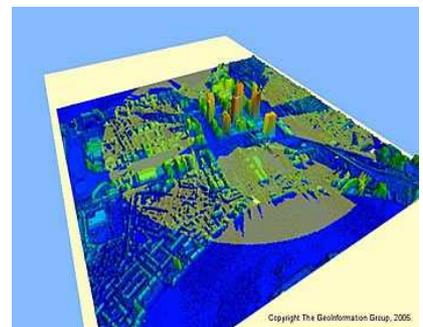
### >>> 전문가 검토의견

휴대폰 단말기 등 무선통신을 이용한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은 민원처리, 안전, 교통, 공사 등의 분야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에서 서울시는 모바일을 이용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앞서 언급한 분야 이외에 문화, 복지, 환경, 교육, 행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경都의 사례처럼 단문서비스(SMS)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시행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가 각종 모바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석민 디지털도시부 연구위원(lsm@sdi.re.kr)

## 6.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저렴한 항공사진 촬영 (런던)

영국 Geoinformation Group은 런던 지리정보를 담은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곧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기존 항공사진이 비싸서 도시계획가나 교통전문가, 홍수방지 전문가가 도시계획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새로운 기술(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로 항공사진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항공사진으로 고도 1500m에서 촬영되며, 런던의 지표와 건축 환경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다. 새로운 항공사진 촬영기술을 바탕으로 도시분야 관계자가 정확하고 저렴한 지리정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rudi.net/udunews/index.cfm#terrain](http://www.rudi.net/udunews/index.cfm#terrain))

## 7. 구민공익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 (동경都 나카노區)

동경都 나카노(中野)區는 2006년 3월부터 '나카노區 구민공익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회(町會), 자치회, 자원봉사단체,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지역의 환경미화, 안전, 고령자와 자녀양육 지원 등 구민공익활동을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나카노區는 2004년 6월에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구민단체의 공공서비스 분야 참여방안을 규정하고 지원방침을 정했다. 방침의 기본구상에서 밝힌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어 제정을 검토하게 되었다. 조례는 구민공익활동 실시 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나카노區 구민공익활동 추진기금 설치와 나카노區 구민공익활동 추진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www.city.tokyo-nakano.lg.jp/019/d00200007.html](http://www.city.tokyo-nakano.lg.jp/019/d00200007.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 자발적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자원봉사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 주민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 8. 사회복지기금 Opportunities Fund의 1차 지원대상 발표 (런던)

런던개발청이 책임을 맡아 운용하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금인 Opportunities Fund가 친환경산업, 지구별 재개발·재정비 지구, 장애인·유색인종·여성 실업대책, 평생교육 분야에 지원되어 최소 2만 명이상의 런던 시민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총 766건의 응모 사업 중 기금지원 대상으로 채택된 94개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주축로 집행되고, 여기에는 6000여 사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3년에 걸쳐 시행하는데, 차기 지원사업은 2007년 여름에 선발해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런던개발청 관계자는 1차 지원대상 탈락자를 상담해 2007년에 다시 지원하도록 적극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1422](http://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1422))

## 9. 허가규정 위반한 탁아소에 행정처벌 꺼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내 탁아소의 탁아비용이 치솟고 있으나 상당수가 보조 부족은 물론 놀이시설마저 허가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탁아소는 하루 탁아비용으로 100호주달러(약 7만 원)까지 받고 있지만 영리추구에만 급급, 위생환경마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사우스웨일스州 공공서비스부는 2005년 당국의 허가규정을 무시한 시드니 일원의 67개 탁아소를 적발했다. 공공서비스부가 적발한 허가규정 위반 내역은 광범위한데, 이 중 컴벌랜드 프로젝트 지역의 한 탁아소는 허가규정을 무려 40개나 위반했다. 이 탁아소는 한 보조가 동시에 5명 이상 어린이를 돌보고 있었으며 기저귀나 더러운 옷을 보관하는 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일부 탁아소는 자격 없는 보조를 채용했으며 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 탁아소는 유리창문이 깨져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으나 이를 방치하고 운영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새 법에 따르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증 없이 탁아소를 운영할 경우 최고 2만 2000호주달러(약 15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종전 1100호주달러(약 78만 원)에 비해 범칙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드니 일원의 탁아소 수가 많이 부족해 적발된 탁아소를 모두 처벌할 경우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되어, 탁아소 상당수가 허가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행정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www.hojudonga.com/index.php?p\\_menu=m\\_read&seq=1458](http://www.hojudonga.com/index.php?p_menu=m_read&seq=1458))

## 10. 보육원을 이용해 시간제 일시보육사업 실시 (동경都 아라카와區)

동경都 아라카와區는 집에서만 아이를 보육하는 부모가 관혼상제에 참여하거나 휴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시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립보육원 한 곳과 지정된 구립 보육원에서 일시보육을 하고 있다. 일시보육에 드는 비용은 사립보육원의 경우 4시간 이내는 2400엔(약 2만 1000원), 4시간 초과시에는 4800엔(약 4만 3000원)이며, 구립보육원의 경우 4시간 이내가 2000엔(약 1만 8000원), 4시간 초과시에는 4000엔(약 3만 6000원)이다. 이용횟수는 1세대 당 한 달에 5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대상은 區內에 거주하고 단체보육이 가능한 유아이며, 보호자가 학교행사, 지역사회활동, 관혼상제에 참여하거나 통원,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www.city.arakawa.tokyo.jp/a016/d06000004.html](http://www.city.arakawa.tokyo.jp/a016/d06000004.html))

### 11. 재생가능 에너지 전략 수립 (동경)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확대는 에너지 절감과 함께 지구온난화 대책의 주축으로서 중요할뿐더러, 재해 발생시 방재대책 측면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창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동경都는 시범사업의 범위를 넘어 재생가능 에너지의 본격적인 이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동경都 재생가능 에너지 전략을 수립했다.

현재 동경都의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량은 都内 에너지 소비량(83만 TJ: 2003년도)의 2.7% 정도이다. 都内 도입분(0.7%) 중에서는 폐기물 발전·열 이용과 태양에너지 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都内 도입분이란 都内에서 발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용과는 다르다.

동경都 재생가능 에너지 전략은 2020년에 동경의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을 선진 국가나 도시 수준(독일과 영국: 20%, 미국 캘리포니아州: 33%)에 맞춰 20% 정도로 높인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① 녹색전기 구매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보급 확대, ② 시민 출자와 기업 협찬 도입 등 시민·지역참가형 사업 추진, ③ 에너지 절감형의 쾌적한 주택 개발·도입을 위한 설계 경연 대회, ④ 태양열 주택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4/20g43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4/20g431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은 1톤당 약 30유로(약 3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방지협약이 국가경제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향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암시하는 작은 사례에 불과하다. 외국의 주요도시들은 도시환경개선과 지구환경보전이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 참고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생활경제과뿐 아니라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국, 환경국 등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12. 지역통화인 에코머니(eco-money)로 서비스 거래 (일본 효고縣)

에코마크(eco-mark), 에코하우스(eco-house), 에코카(eco-car) 등의 단어 앞에 들어가는 에코는 에코로지(ecology)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이다. 에코란 '환경을 배려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현재 에코가 접두어로 들어간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신조어 중 하나가 '에코머니'(eco-money)다. 에코머니는 특정 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통화로 화폐 가격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서비스 거래에 사용된다. 에코머니는 환경, 복지, 자녀양육 등의 서비스 대가로 거래되며 분야를 초월한 범용성을 갖는다. 일본 효고(兵庫)縣 타카라즈카(宝塚)市에서는 2000년에 'ZUKA'를 에코머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회원 약 500명이 정원 손질, 컴퓨터 교육, 청소, 자원봉사를 하며 에코머니를 사용한다.

1997년에 NPO법인 에코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카토 토시하루 대표가 에코노미(economy), 커뮤니티(communitiy), 에코로지(ecology)의 합성어인 '에코커뮤니티'(ecomunitiy)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에코머니를 만들었다. 2004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500여 종의 지역통화가 유통되고 있다.

(朝日新聞, 2006. 4. 16)

### >>> 전문가 검토의견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여러 도시에서 3000개 이상의 지역통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IMF 국제금융체제가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을 때인 1998년 3월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다. 한 때 전국적으로 30여개 시스템이 있었고, 서울에만 서초 품앗이, 송파 품앗이, 관악 지역화폐 등 10여개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다가 IMF가 극복되면서 관심밖으로 밀려났다. 지금은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체계화한 지역통화는 한마디로 돈 없이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통화는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환경보전에도 도움을 준다. 경제가 어려운 지금은 IMF 때보다 지역통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지역통화 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창우 기획조정실장(lcwsdi@sdi.re.kr)

## 13. '동경 그린십 액션' 참가 기업 모집 (동경)

동경都는 산간지의 산림과 구릉지, 시가지의 잡목림 등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도민(都民), 시민단체, 기업, 행정기관이 서로 연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동경 그린십 액션'을 실시하고 있다. '동경 그린십 액션'이란 보전지역에 대해 기업,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연대해 펼치는 자연환경보존활동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자연보존활동에 참가하고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대상으로 보존지역을 활용하고 있다. 참가 기업은 지역별로 정해진 활동비용을 내고 회사 직원은 직접 자연보존활동에 참가한다.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1개 회사, 2004년도에 5개 회사, 2005년도에는 9개 회사였다.

([www.metro.tokyo.jp/INET/BOSHU/2006/04/22g471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6/04/22g47100.htm))

## 14. 지역계획과정 개선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가속화 필요 (영국)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영국의 경우 섬이라는 지리·기상학적 조건을 활용한 풍력 발전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지역계획과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끈다. 영국 풍력발전협회(British Wind Energy Association)는 2005년 10월 자체 연구조사 결과, 2004년 이후 해안 풍력발전소 건설이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만 2005년 발전소 건설의 2배에 해당하는 655메가와트 시설이 증설되어 현재 3000메가와트 시설이 확보된 상태다. 2010년에는 현재 계획 심사와 건설 지연요소를 반영해 예측하면 풍력발전으로 영국 전체 전력수요 예측의 5%(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약 50%)인 600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시설계획 심사 - 주민의견 수렴 - 허가 과정(환경영향평가 포함)에 소요되는 기간이 발전시설 신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 계획과정과 이로 인한 건설 지연 문제를 개선하면 2010년 최대 7515메가와트의 풍력발전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영국 지방정부별 평균 계획기간은 잉글랜드 10개월, 스코틀랜드 14개월, 웨일즈 27개월, 북아일랜드 28개월로 조사되었다.

([www.bwea.com/pdf/OnshoreWindPoweringAheadFull.pdf](http://www.bwea.com/pdf/OnshoreWindPoweringAheadFull.pdf))

([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3958920.html](http://www.planningportal.gov.uk/england/professionals/en/1115313958920.html))

## 15. 혼잡통행료 부과와 대기오염의 관계 보고서 발표 (영국)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혼잡통행료 부과가 차량 이용을 줄여 대기오염을 저감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정부의 대기오염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차량과 선박,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여전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평균 8개월 가량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과정에서 대기오염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혼잡통행료 부과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Planning, 2006. 4. 6)

### 한줄 뉴스

- '런던 속의 중국' 프로그램 일환으로 런던시장 북경, 상해 등 중국 주요도시 방문, 교육문화관광 교류로 對중국 마케팅 박차
  - 런던-북경간 도시마케팅 활성화 협약 조인, 북경에 런던 사무소 개설, 상해에 런던市 관계자 파견

#### <동경>

- 수도권, 민간업체와 공동연구 통해 정수장 발생토를 보수성 포장재, 옥상녹화재료로 사용 계획
- 스미다區, 민간 오피스 빌딩을 벤처 세터라이트 오피스(satellite office)로 지정해 입주 기업 모집
  - 입주기업에 임대료 보조, 관련 정보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정부가 건축기준법을 개정하여 건축물에 석면 사용을 금지한 것에 발맞추어 동경都도 「건물해체시 석면 비산 방지 매뉴얼」 개정

**16. 올림픽선수촌을 환경친화 에코빌리지로 재개발 (런던)**

2012년 런던올림픽을 위해 재개발될 런던 동부 지역에 1000가구 규모의 환경친화 주거공간이 건설될 예정이다. 태양열, 심야전기,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에코빌리지는, 양쯔강 하류 동탄(Dongtan) 신도시를 설계한 건축가 피터 헤드(Peter Head)가 이끄는 기술용역업체 Arup과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 런던개발청(LDA)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인구 8만 명을 위한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한 계획도시인 동탄에서의 실험 성과를 재개발지구에 적용함으로써, 런던 시장이 적극 추진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지대, 환경친화적 건물 활성화 프로그램이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olitics.guardian.co.uk/gla/story/0,,1753376,00.html](http://politics.guardian.co.uk/gla/story/0,,1753376,00.html))

**17. 도시공간 개발의 질과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코드 적용 (영국)**

영국 부총리실은 최근 디자인코드 평가를 통해 디자인코드 개발과 적용이 도시공간 개발에 있어 전체적인 조화와 공간의 질,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디자인코드를 적용한 도시공간 개발은 관련자에게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개발과정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개발에는 디자인코드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대규모 개발에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Planning, 2006. 4. 5)

**18. 인구 100만의 신도시, 사이타마市の 미래 과제 (동경都 사이타마市)**

일본 동경都 사이타마市가 탄생한 지 5년이 되었다. 행정·경제·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로 출범하면서 21세기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2000년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제2 도쿄타워 유치 실패로 인구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000년도에 계획된 신도심의 취업인구는 약 5만 7000명이었으나, 현재 취업인구는 약 30% 수준인 1만 7400명이다.

신도심 정비에 제약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인근 지역과의 접근이 나쁜 도로 사정에 있다. 사이타마市의 도시계획 도로의 정비율은 2005년 4월 현재 40.3%로, 정령시(政令市) 15市 중 최악을 기록했다. 2006년 1월에 수립된 종합진흥계획에는 '사이타마 신도심을 활용한 자립도시의 형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긴 했지만 구체적인 구상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두 번째 문제는 '평성(平成) 대합병(大合併)'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이타마市가 기존 3개 市의 관제합병(官製合併) 단계에서 주민대표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합병 2년 만에 정령시로 이행되긴 했지만 행정구역 구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역 간 대립도 여전히 남아 있어 주민의견을 무시한 합병으로 지적되고 있다.

([www.yomiuri.co.jp/e-japan/saitama/kikaku/046/1.htm](http://www.yomiuri.co.jp/e-japan/saitama/kikaku/046/1.htm))

## 19. 구 공장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오락, 휴식공간 조성 (상해)

상海市에서 유명한 '농당(弄堂)공장'(근대식 공장건축)의 집결지인 통러방(同樂坊) 지역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단장했다. 이미 근대건축을 리모델링해서 상업화에 성공한 신티엔띠(新天地) 조성 경향이 있는 상海市는, 이번에 근대 공장건물의 리모델링으로 오락, 문화, 상업시설 구역을 탄생시켰다. 이번 지역은 외국인들만 주로 찾는, 소수를 위한 신티엔띠와는 달리 중산층이 즐길 수 있는 각종 바(bar)와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며, 2006년 10월 개장을 앞두고 현재 90%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www.shghj.gov.cn:8080/gh05/front/contentWord.php?contentId=7913)

## 방재·안전

## 20. 시민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이용인원 제한 (북경)

앞으로 북경市는 대형매장과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이용객을 제한할 계획이다. 2006년 4월 5일 북경市 안전감독국은 '북경시 체육운동장 안전관리규정(시안)' 등 5개 정부규정 초안을 발표해 시민의견 수렴 중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수영장은 250㎡당 1명의 구조원을 배치해야 하고 실내헬스장, 실내수영장, 스키장의 1인당 최소필요면적은 각각 3㎡, 2.5㎡, 20㎡다. 규정이 확정되면 수영장, 스키장 등 계절적으로 이용객이 집중하는 시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등 시설안전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매시설, 대형슈퍼, 유흥음식점 등도 주말이나 특정 휴가기간에는 시설안전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상존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규정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1인당 최소면적을 정하고 있다. 유흥음식점의 경우 1인당 최소 1.2㎡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할인점 등 유통매장의 카트는 100㎡ 당 10대를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객의 일시적 급증은 공공장소의 최대 불안전 요인이므로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면 이용인원을 제한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北京日報, 2006. 4. 6)

## 한줄 뉴스

- 영국 텔포드 지역의 친환경 주거단지인 라이트무어 마을(Lightmoor Village) 완공
  - 평생주거 개념을 적용한 유연한 내부구조 설계, 지속가능한 도시배수 시스템 설치
- 영국 상공부 산하 '신재료 개발혁신팀', 친환경 도시건축 신소재개발 전략보고서 발표
- 캐나다 정부, '장소마케팅과 공공공간 활성화부' 신설해 교통부, 보건복지부 통제권한 부여
- 베를린市, 봄철 숲속 산책시 야생동물 보호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공지
- 파리 13구 마세나 지역, 산업문화재급 건물 개축과 파리7대학 건물 신축 등으로 학문의 중심지로 재탄생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도로교통부 장관, 출근길 버스전용차로 불법주행으로 사과 망신